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2일 국세청은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두 업계에 대해 세정지원을 나서는 데는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다.

정유업계는 석유 수요 감소·유가 하락으로 석유재고 평가손실, 정제마진 손실폍이 확대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주류업계도 내수시장 위축에 주류 출고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며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책에 따라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가 오는 7월말까지 3개월 간 유예된다. 국세청에선 이를 통해 약 2조 554억원 규모(세금납부액 5개 정유업체 1조 3745억원, 7개 주류업체 6809억원)의 자금부담 완화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관련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총 525만건.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9조 7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 허용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3일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수출입업체와 관련된 개선사항 51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를 왜 풀어야하는지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로 지난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앞서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관련 기업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용도변경이 불허되면 해당 기업은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바이오산업계 경쟁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관세청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절차에 따른 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가 수입 통관을 거칠 경우 연구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원자재에 대한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 의무 폐지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개선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간소화 품목확대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등의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세정지원 나선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은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황미애, 이하 소진공)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후 재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 주관 창업 및 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강사진을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발간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공동 홍보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협약식에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들의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발굴한 뒤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부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